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발 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담당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010-8402-1718)

발송일자 2025년 9월 4일

제 목 [보도자료]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한 성명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반도노무자명부’의 공개를 요구하라!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오늘(4일)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주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으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측이 추도사 내용 중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2024년 11월 24일 개최된 추도식이 일본 정부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희생자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치러진 윤석열 굴욕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였다.
- 일본 정부는 2015년 메이지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forced to work)."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도광산의 명백한 강제동원 증거인 ‘반도노동자명부’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한국 정부는 불법적인 식민지배 아래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도광산으로 끌려가 고통을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역사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기록하도록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사도광산에 끌려가 고통을 당한 1,500여 명 조선인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성명서 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 성명서 전문 1부. 끝.

[성명서 전문]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한 성명>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반도노무자명부’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라!

오늘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주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으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측이 추도사 내용 중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24년 11월 24일 개최된 추도식이 일본 정부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희생자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치러진 윤석열 굴욕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였다. 작년 추도식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역사 정의를 외면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표 대일 굴욕외교가 낳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메이지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 강제노동을 부정했다. 또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직후 아베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강제성을 부정하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사도광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특별 전시에서도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명백한 강제동원의 증거인 ‘반도노동자명부’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가 과연 어떠한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반도노무자명부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추도식에 희생자 유족을 초청하여 일본 정부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불법적인 식민지배 아래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도광산으로 끌려가 고통을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역사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기록하도록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도광산

의 운영 주체인 골든사도(미쓰비시 자회사)는 ‘반도노무자명부’ 원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조선인 강제동원의 명백한 증거인 명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이 명부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밝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역사를 직시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당시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세계유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도광산에 끌려가 고통을 당한 1,500여 명 조선인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9월 4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식민지역사박물관